

2002년 10월 23일

한국교총 토론회 노무현 후보 연설

-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
- 머물고 싶은 학교, 존경받는 교원 -

존경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군현 회장님과
각 시·도 회장단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교육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교육에 관한 저의 평소 소신과 비전을 말씀드리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초등학교 취학률이 45% 정도인 교육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5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학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또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 최우수 수준을 유지하는 교육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후진국에서 세계 11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교육이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배고픈 허리를 졸라맨 부모님들의 희생, 그리고 박봉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오로지 제자 사랑의 외길을 걸으신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모든 교원 여러분께 뜨거운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는 우리의 학교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 대신 정보기술 중심의 정보화사회가 전개되면서, 획일화된 지식과 가치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창의성을 지닌 인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은 바로 이러한 요구들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교육 현장이 알게 모르게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교육개혁의 결과가 모두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절실한 요구들이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하였고, 그 결과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부담과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특히 유능하신 많은 교원들이 일찍 현장을 떠나게 되어 오늘날 심각한 교원 부족 사태를 빚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의 교육 발전 과정과 특히 지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공과를 냉정하게 따져보면서, 교육에 관한 저의 소신과 비전, 그리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 나갈 교육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교육은 누구나 자아의 성장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교육의 형평성과 자유를 확충하는 데 두고자 합니다.

얼핏보면 양자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전자는 교육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농어촌 지역 주민, 학습부진아와 학업중단자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고,

후자는 가급적 교육에 관한 규제를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국가가 확고하게 책임지는

동시에, 개인의 성장 기회를 무한히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좀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교육은 지나치게 개인간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멀리 보기보다는 눈앞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수 십년간 우리 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성과는 주로 양적인 측면에 국한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보면, 학급당 인원수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등에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들은 극심한 입시 경쟁에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학부모들은 매년 국가 교육예산에 맞먹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은 공교육의 위기 속에서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교육문제들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사회적 풍토와 문화 등과 관련된 고질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학벌주의, 획일성, 타율성이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벌중심의 연고주의는 수 백년 간 지속돼 온 하나의 문화입니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극심한 입시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특정 집단의 권력 독점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연줄에 의한 수많은 부패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학벌주의를 없애고, 실력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의 투표행위에서, 기업의 상거래에서, 직원의 채용에서 합리적인 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실력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획일주의는 과거 식민지배와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생산의 산업시대에는 다소 유용한 구석도 있었지만, 개인의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정보화시대에는 다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자연의 생태계에 있어서도 키가 큰 풀이 있으면 키가 작은 풀이 있고, 습지를 좋아하는 풀이 있으면 마른 데를 좋아하는 풀도 있습니다. 생태계는 이렇게 다양성으로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하나 하나는 그 능력과 자질에서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명문대를 향해 한 줄로 세우고,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 성적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교의 형태와

교육내용,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와 인생의 성공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준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자 우리 교육이 사는 길입니다.

셋째, 타율의 문화 역시 일제 식민지배와 오랜 군사독재의 산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자율이 수없이 강조되었지만, 아직도 일선 학교 행정을 보면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가 통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도 각종 규제와 지시에 의한 타율적인 관행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앙이 아니라 지역과 단위학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한가운데에 바로 여러분 교원들이 서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에 관련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각급 학교의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방향으로 우리 교육을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학교교육을 내실화·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수요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08년까지 초등학교는 25명, 고등학교는 3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실을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늘 사용하는 학교 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만큼이나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가겠습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되, 그들이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안에서 선택과목과 수준별 수업의 확대등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축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대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학생 선발 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대학 선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여 수시 복수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행 수학능력 시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기초적인 읽기나 쓰기, 셈하기,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체능 실기 등 교과 외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감면과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투자우선지역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이나 중도탈락자, 여성 등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만5세 아동의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시키고, 이들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교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별하여 법정 정원의 증원이나 보수 기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담임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의 수업 외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교무행정 업무의 전담인력을 작은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직급과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 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교직원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양성과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연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대 및 사대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고, 이미 제안된 바 있는 교원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원의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부 개혁을 포함하여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중심의 현행 교육관련 법령을 조장(助長)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위학교와 교원들이 원칙상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를 개혁하여, 그 기능을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하여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의 운용등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넷째,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고등교육의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대학이 지방의 문화와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임기 중에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 비율도 대폭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가칭 「지방대학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대학의 강점과 약점, 지역 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육성할 필요와 성과가 예상되는 분야에 지원을 집중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산학협력 체제의 강화로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 가능성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의 운영 및 지원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의 차별화·특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개혁과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재원을 경상비의 증액과 특별회계를 통하여 확충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교육재정 규모를 저희 민주당이 공약한 바 있는 GDP의 6%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에서 GDP대비 7%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재정 규모와 증가율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의 경제 여건상 6% 확보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떻게든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하여(2002년 현재 추경 포함 GDP의 4.96%) 임기말인 2007년에는 GDP의 6%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을 포함한 국제관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의 아픔을 안고 급박하게 달려온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서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면 우리는 동북아의 중추국가로 발전할 것이지만, 변화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면 어떤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기로에서, 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변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개혁은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교육부가 주체가 된 '지시에 의한' 개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생 교단을 지켜 오신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교육부가 아니라 교원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감한 개혁도 단행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육주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책담당자를 한데 모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것입니다. 이들의 힘으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합의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

과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선생님이 가장 존경받는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